

사회·문화 교류 확대가 신뢰형성의 첫 단추

조 한 범 /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의의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신뢰형성을 통한 남북관계의 안정적 관리 및 발전의 지향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강력한 억지력과 안보능력의 확보를 전제로 교착상태인 남북관계의 정상화 및 한반도 평화를 실현한다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가장 중요한 의의는 박근혜 정부가 남북한 간 신뢰형성을 위한 준비가 되어있다는 점과 우선 가능한 교류와 대화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는 점에 있다. 초기 단계의 남북한 신뢰가 형성될 경우 남북관계를 확대하고, 민족공동체 통일방안과 연계하여 남북 경제·환경공동체 형성을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교착상태에 빠진 남북교류 전반에 긍정적 효과를 주게 될 것으로 보인다.

남북 사회·문화교류 전망

천안함 사건에 대한 대북제재인 5.24조치는 개성공단을 제외하고 모든 남북교류에 영향을 미쳤으며, 교착국면이 지속되는 원인으로 작용했다. 북한의 사과와 5.24조치가 연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명박 정부는 남북교류 재개에 있어서 구조적 한계에 직면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박근혜 정부의 경우 대화 및 가능한 교류를 통해 초보적 신뢰의 형성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유연성이 있으며 이는 5.24조치의 경직성을 완화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이산가족·취약계층 지원 등 인도주의 현안에 대한 남북 협력 재개 ▶ 강산관광 및 일부 경협, 민간교류 재개 등 5.24조치완화 ▶ 당국 대화 재개 ▶ 천안함 연평도 사과유도 ▶ 5.24조치 전면해제 및 남북교류의 정상화 ▶ 비전코리아 및 그린데탕트 계획에 따른 경제·환경공동체 형성 추진의 순서로 남북관계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추진에 따라 정치·안보 상황과 거리가 있는 사회문화분야의 남북교류 활성화를 위한 긍정적 지형이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남북한 간의 상징적인 사회문화교류 사업의 경우 정치, 군사적인 경직상황을 우회하여 신뢰를 형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천안함 사건 사과 및 북핵문제의 진전 등 민감한 현안의 직접적 해결이 어려운 상황에서 사회·문화교류를 통해 남북 간 신뢰관계 형성을 위한 초기적 조건이 마련될 수 있다는 것이다.

남북 사회·문화교류의 재인식

정치군사적 남북관계에 민감한 영향을 받는 특성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추진된 사회·문화교류의 긍정적 효과를 도출했다고 할 수 있다. 아직 잔존해 있는 한반도의 냉전구조와 냉전문화에도 불구하고 남북한 사회·문화교류로 인해 북한은

더 이상 금단의 땅이 아니며, 북한주민들도 남한의 실상에 대해서 조금씩 눈뜨고 있다. 특히 남북한 사회·문화교류는 남북한 주민의 사회적 거리감 완화에 기여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문화·예술·스포츠 분야 등의 교류를 통해 남북한 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드라마·영화·가요 등 북한 사회에 '한류'의 바람이 불고 있으며, 북한의 사회문화적 일상이 한국 사회 생활세계의 일부로 편입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북한 노래인 휘파람이 가요처럼 유행한 적이 있고, 북한에서도 남한 노래 한 두곡 부르지 못하면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으로 취급받는다. 외부문화의 유입을 막기 위한 북한의 '모기장 전략'에도 불구하고 사회문화교류는 북한체제에 점진적이지만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용천역 폭발사고 당시 한국 사회에서 진행된 국민적 모금운동은 국내 일반적 재난시의 경우와 차이가 없었으며, 이는 과거와 질적으로 변화된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문화 교류를 통한 남북한 이질감 및 거리감의 완화는 사회통합을 위한 실질적 통일준비이자 장기투자로서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지속적인 사회문화교류의 추진은 통일과정의 사회문화적 충격을 완화하고 통합 비용의 감소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제도적 통일보다 내적 통합에 어려움을 겪은 독일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사회문화 교류가 북한 주민의 내적 변화를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정치·군사적 남북관계의 종속변수가 아닌 사회문화교류의 독립적인 의의가 강조될 필요가 있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연계 사회·문화교류 추진방안

북핵시대의 남북 사회·문화교류 논리 정립

북핵시대의 도래는 대북·통일정책 및 남북교류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요인에 해당하며, 기존 정책 논리의 수정 및 재정립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중

요한 것은 북핵이라는 구조적 위협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남북 사회문화교류가 추진되어야 하는 논리를 정립하는 것이다. 북한의 무력도발과 핵위협이 상존하는 한 남북 사회문화교류의 획기적 활성화는 가능하지 않다. 적대적 관계를 신뢰관계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복합적이고도 장기적인 과정을 필요로 한다. 신뢰관계는 일시적인 조치나 협상으로 형성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교류와 협력의 지속적 추진은 필수적인 전제에 해당한다.

남북 사회·문화교류는 신뢰관계 형성을 위한 첫 단추로서의 의미를 지니는 동시에 정치·군사적 신뢰관계를 강화하는 요소로서 기능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특히 신뢰관계 형성을 위한 지속적 노력의 추진과 이를 위한 ‘인내’의 당위성을 국민들에게 설득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대남협상 행태의 교정에 시간이 필요할 것이며, 북한의 일방적 행위에도 불구하고 신뢰관계 형성을 위한 교류협력의 노력은 지속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북핵시대의 사회문화교류 논리를 개발하는 것은 신뢰 프로세스의 지속적 추진을 위한 국민적 지지기반의 확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남북 사회문화교류의 기본방향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 입각한 사회·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교류·협력의 제도화와 이를 위한 인프라의 구축이 남북 사회·문화 교류 추진의 기본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중장기적으로 상징적 차원의 교류협력을 넘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단계에 조응하는 실질적 사회·문화교류의 추진구도를 정착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남북 사회·문화교류를 국민적 합의기반 위에서 추진함으로써 남남갈등의 소지를 제거하고 정책적 추진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통일을 위한 실질적 대비이자 내적 통합의 기초가 된다는 점에서 남북 사회·문화교류의 지속적, 안정적 추진구도의 기초가 확립될 필요가 있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단계별 남북 사회문화교류 추진 방향

〈초기〉 사회·문화교류 기초의 유지와 인프라 강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추진 초기단계의 경우 정치·군사적 사안과 거리가 있는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 활성화를 위한 시도가 필요하다. 사회·문화교류의 경우 특성상 UN의 대북제재와 비교적 자유롭다는 점에서 다양한 접근법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민족적 상징성이 큰 사안을 기획함으로써 신뢰를 위한 초기적 조건을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 거래말큰사전 사업의 정상화를 비롯하여 문화유적 보호의 시급성이 있는 개성 만월대 발굴 협력사업 등 현안을 중심으로 사회문화교류 재개의 모멘텀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금강산 관광의 재개도 전략적 차원에서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안중근의사 유해 발굴 및 관련 사업과 독도 관련 문화사업 등 상징성이 있는 대형 사회·문화교류 사업의 전략적 추진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적으로 재개될 것으로 전망되는 대북 인도적 지원과 연계한 사회·문화교류 사업도 모색되어야 하며, 북한 사회·문화계 전반에 대한 물질·기술적 지원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취약한 국내 남북 사회·문화교류 추진 기반의 강화작업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 구체적인 사회·문화교류 로드맵 작성, 재정기반 확충 및 내부적 역량 강화 지원, 민간단체·전문가 지원 및 거버넌스 구축, 그리고 그동안 진행된 남북 사회·문화교류 DB화 및 백서, 사례집 발간 등의 사업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중기〉 사회·문화교류의 제도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중기의 경우 형성된 남북한 신뢰를 자원으로 상징적 차원을 넘는 남북 사회·문화교류의 안정적, 실용적 추진기반의 마련이 모색되어야 한다. 법적·제도적 정비와 아울러 남북 사회·문화교류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프로그램이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 인적교류의 경우 단기 방문을 넘어 중장기 체류 형태로 전환되어야 하며, 상호 연수 및 공동연구의 추진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문화교류와 산업의 연계 및 교류 거점의 개발도 추진될 필요가 있다. 창조경제 기조와 남북 사회문화교류를 연계한 문화산업분야의 남북협력을 활성화하는 다양한 방안이 모색될 수 있을 것이다. DMZ 지역의 환경·문화 복합 교류단지 개발, 개성공단 내 사회·문화교류 사업 및 거점 개발 등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 관광의 발전적 확대도 모색될 필요가 있다. 남북교류의 전문화·세분화 시대에 대비한 종합적 사회문화교류의 인프라도 구축되어야 한다. 이 같은 점에서 남북 사회문화교류진흥법 제정, 남북 사회·문화 교류원(센터)설립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세계문화유산 공동 등재, 남·북 코리안 디아스포라 연계 문화사업 개발 등 사회·문화 분야의 남북 국제협력 강화도 주요 추진방안에 해당한다.

〈장기〉 남북한 사회·문화공동체 형성 지향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성공적으로 이행될 경우 장기적으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 입각한 사회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방안들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남북 사회·문화교류협정 체결을 통해 남북한 간 인적·물적 교류의 자유화 상태를 지향할 필요가 있다. 환경·사회문화공동체의 연계 발전 방안이 다양한 차원에서 강구될 수 있을 것이며, 수시 방문 및 연수 등 장기 체류형 사회·문화교류가 정착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분단의 유제로 남아 있는 냉전문화 해소를 위한 남북한의 노력과 양자 협력도 구체화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사회·문화 분야의 표준화 사업을 통한 남북 사회통합 대비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고려사항

70년대 미·중간 핑퐁외교, 90년대 초반 스포츠 분야의 남북협력 등 갈등적 외교관계의 개선과정에서 사회·문화교류가 촉매제로 활용된 경우가 많다. 반면, 관계가 악화될 경우 사회·문화교류가 가장 먼저 중단된다는 점에서 취약성이 있다. 현재와 같은 정치·군사적 대치국면의 완화는 남북교류 경색국면의 해소에 있어

서 매우 중요하다.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에 대한 강력한 억지력을 전제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진의를 북한에 전달하는 방안이 다각도로 모색되어야 한다. 북한 역시 경제위기 상황에서 대치국면의 고비용구조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에서 대화의 여지는 남아있다고 할 수 있다. 공개 또는 비공개 방안을 포함하여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유도하여 대치국면을 완화하고 남북교류 재개의 여지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사회·문화교류의 지속적, 안정적 추진을 통한 실질적 통일대비에 주력하는 한편, 북한주민의 신뢰감 형성을 위한 맞춤형 교류전략이 모색되어야 한다. 동·서독 통일의 과정에서 결정적 역할을 한 동독주민의 서독체제에 대한 신뢰가 양독간 사회·문화 및 인적교류의 결과로 형성된 것이라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남북교류 휴지기에 대비하여 국내인프라 강화 및 전문 인력 양성, 추진주체 지원 등 교류역량 강화를 위한 지속적 준비가 필요하다. 남북교류시대의 개막을 위해 남남갈등의 고비용 구조를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내적 노력도 필요하다. **統**